



기억과전망

Memory & Vision

2013년 여름호 (통권 28호)

지난해 말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자 “새 정부가 국민의 뜻을 모아서 공약을 잘 실행하기 바란다”는 덕담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치열한 선거전을 펼친 끝에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고 승자를 축하하는 모습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한 일면처럼 보였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48%의 유권자 대다수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장했던 경제민주화, 복지정책 확대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기를, 그리하여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을 차분하게 실현해 가기를 기대하였다.

이제 취임 후 백일이 지나갔다. 아직 기대를 접기에는 이른 시점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인수위 시절부터 끊임없이 지적되었던 편중된 인재 풀과 불통의 인사 스타일은 급기야 충격적인 사건, 즉 청와대 대변인의 해외순방 중 성폭행 사건으로 폭발되고 말았다. 보수정당 출신의 대통령이기에 오히려 남북대화를 강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던 역설적인 기대감도 있었다. 그러나 남북한 당국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무한대치 끝에 개성공단이 마비되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명박 정권과는 차별화된 대북정책을 하지 않겠느냐는 희망 섞인 기대는 점차 수그러드는 것 같다. 비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명목상 ‘사

장님'인 대리점 업주와 편의점 주인들마저 자살로 몰아가는 가혹한 갑-을 관계는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억누르는 일상화된 폭력을 드러낸다. 재벌과 자본가들의 조세피난처 계좌와 탈세의혹이 연일 폭로되는 가운데, 이제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진주의료원 폐쇄논란, 원자력 발전소의 불량 부품 문제, 송전탑 설치에 반대하는 밀양주민들의 저항, '무상보육'의 이면에서 만연하는 비리와 사각지대 문제 등등 다양한 영역과 지역의 갈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물론 선부른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시민들은 오래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유산을 계승하여 한국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자는 이야기는 국민통합을 말할 때마다 흔히 쓰이는 정치적 수사(rhetoric)가 되었다. 그러나 역사를 성찰하고 지난 시대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새로운 미래를 구상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냉전적 보수와 반독재 민주화 세력의 대립은 끝난 듯 끝나지 않은 것 같고, 이른바 우파와 좌파는 각기 자기분열을 하면서 뉴라이트와 '네오라이트', 진보정당 내의 다양한 분파들로 복잡한 대립구도를 만들어 낸다. 이처럼 복잡다기하게 갈라진 정치적 입장들은 다시금 굴곡진 한국의 근현대사로 투영되어 역사해석 논란을 확대재생산하는 형국이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둘러싼 논쟁, 한국전쟁을 보는 대립된 시각들은 정치적 논쟁과 더불어 학문적인 토론의 여러 겹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종편 방송과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퍼져나간 새로운 논란은 5·18 민주화운동을 직접 겨냥하고 있어 더욱 충격적이다.

일부의 논란을 지나치게 일반화할 필요는 없겠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 5·18 광주항쟁이 폭동으로 폄하되고 무엇보다 '민주화'라는 말의

의미가 화석화되다 못해 변질되는 상황은 참으로 당혹스럽다. 일부 인터넷 게시판에서 산업화는 우파, 민주화는 좌파 진보논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쓰이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싫어요’라는 의미로 ‘민주화’ 버튼을 클릭한다고 한다. 한 아이돌 그룹의 가수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저희는 개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멤버를) 민주화시키지 않는다”고 한 말은, 민주화를 위해 수많은 목숨을 던져야 했던 시대의 정서에서는 도무지 해석이 불가능하다.

이른바 ‘일베’ 현상을 진단하는 분석들에 따르면 일베 추종자들은 민주화 이후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빠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진보와 민주화를 주장하는 좌파 엘리트에 적대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들을 알파한 미디어 상업주의에 이용하려는 종편 방송이나, 마치 정치적 우군을 포섭하듯 이들에게 접근하는 국정원의 행태는 무책임을 넘어 몰염치한 것이다. 과연 유럽의 네오나치나 일본의 재특회와 같은 극단적인 청년우익조직이 한국에서도 나타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10대와 청년층 일부에서 확산되고 있는 ‘민주화’에 대한 반감과 진보에 대한 폄하 정서는 무엇을 의미하며 어디로부터 발원하는가에 대해 보다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선 떠오르는 것은 두 가지 단상이다. 먼저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질서는 이제 경제영역뿐 아니라 문화와 일상의 영역으로 깊이 침투하고 있으며, 무한경쟁의 차가운 고통이 일상의 세계를 잠식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는 생각이다. 이제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 대한 정서적 공감이나 공동체 의식보다는 누군가를 몰아세우는 공격과 혐오감의 표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현실을 바꾸는 것은 힘들고 먼 길이지만, 누군가를 탓하고 조롱하는 것은 당장의 쾌감과 즉자

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약자와 소수자를 겨냥하는 혐오와 공격이 만연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맷돌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관계와 연대의 기초를 갈아버리는 동안, 더 많은 민주화와 민주주의가 이에 대항하는 안전한 방어막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과연 대중들에게 줄 수 있었는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다시금 되묻게 된다. 또한 추상적 대의(大義)로서의 민주주의, 총론적 민주화 가치의 반복이 아니라, 민주화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각론과 디테일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민주화가 그저 숭고한 이념에만 머문다면 각박한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생활보수의 물결을 막지 못할 것이다.

이번 호에 실린 논문들은 이러한 고민들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특집 주제는 ‘민주화과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다. 민주화 운동을 단지 거시적 총론 차원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부문 운동 또는 지역 운동의 차원에서 미시적인 쟁점과 현장의 문제들을 부각시키는 연구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세 편의 글이 모두 활동가와의 심층 면접을 통해 민주화 운동의 현장에 질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론을 채택한 것도 흥미로운 공통점이다. 먼저 정태현의 글은 1980년대 학생운동 중에서도 학원 민주화의 사례인 선인학원 공립화 과정을 분석한다. 그간 학생운동사 연구가 주로 메이저 캠퍼스를 중심으로 운동 노선과 정치적 논쟁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 논문은 부패재단 개혁운동에 성공한 인천대의 사례를 다룬다. 여전히 현재적 과제로 남아있는 사학재단 비리나 대학개혁 문제에 많은 것을 시사하는 연구라고 하겠다. 임미리의 글은 2012년 4·11 총선 이후 진보정당의 분열과 쇠퇴를 초래한 주역으로 인구에 널리 회자된 경기동부연합을 분석한다. 경기동부연합이 1980년대 성남이라는 빈곤한 지역을 기반으로 차별과 배제의 기억을 운동역량으로 동원하여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였으나, 결국 기억의 고착과 운동의 퇴행으로 고립

되어가는 과정을 저자는 차분하게 서술하고 있다. 김영수의 글은 1987년부터 1992년에 이르는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노조건설 초창기를 다룬다. 사실 노동조합을 분석하는 연구는 매우 많지만, 이 논문은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결국 조합원의 자발적 열기와 활동가-조합원을 연결하는 원활한 소통을 통해 노동현장을 조직화하는 역량으로부터 나온다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서울대병원 노조의 설립 초기의 활동은 바로 이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의 기획으로는 ‘한국경제와 민주주의’라는 주제하에 두 편의 중량감 있는 글을 함께 실었다. 먼저 이병천의 글은 97년 외환위기와 구조조정을 전환점으로 하여 김대중 정부 시기에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체제의 기본 골격이 형성되었다고 진단하고, ‘김대중 모델’의 특징적 내용과 구조적 모순을 분석하고 있다. 이 시기의 구조조정은 개발연대의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국가와 재벌 간의 특권연합을 해체하고 기초적 시장질서의 자유화를 진전시키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저자는 김대중 모델이 긍정적 효과를 압도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엄중하게 비판하며, 오늘날의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삶의 불안을 초래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원형을 여기에서 찾고 있다. 한국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기원과 성격에 대한 한층 더 심화된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장진호의 글은 ‘금융 지구화’라는 거대한 세계사적 움직임이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한다. 저자는 특히 금융 지구화가 일상생활과 대중들의 의식 안으로 침투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신자유주의적 금융 자유화의 가속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 고용불안이 만성화되는 상황에서, 대중들의 대응은 조직화된 저항이 아니라 ‘자산적 개인주의’, 즉 재테크를 통해 개별적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전

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자산적 개인주의는 대중들이 민주적 참여나 사회적 저항보다는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데 몰두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파편화, 분산화하는 암묵적인 정치적 과정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주의라는 관념에 대한 대중적 불신과 회의주의, 냉소주의가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금융 지구화의 영향력은 단순히 외국자본이나 외세의 압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를 내면화한 한국의 경제관료들은 금융지구를 거부할 수 없는 객관적 대세로 수용하고 있다. 금융관련 의제들의 의사결정을 소수 경제관료 및 전문가들의 일방적 결정에만 맡겨둘 수 없으며, 공적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의 폐쇄적 거버넌스를 극복하는 것 또한 중요한 민주주의적 과제를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대중들의 참여 민주주의적 과정에 의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는 복지국가와 문화사회 건설이라는 민주적 과제 역시, 이처럼 금융화된 경제구조, 금융화된 시민사회, 금융화에 포박된 개인적 일상성으로부터 대중들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진단한다.

이번 호의 일반논문들은 다양한 역사적 시기와 쟁점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행선의 글은 해방 후 미군정기에 근대적 의미의 여론 정치가 형성되는 과정을 조명한다. 당시 조선의 언론기관들이 여론조사 설문을 실시하고 여론 정치 및 지식인 정치를 시도한 점들을 사회사적 차원에서 고찰하고 있다. 심영의 글은 5·18 문학을 통해 5·18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시도이다. 5·18 항쟁을 다루는 많은 문학 작품에서 민중계급은 투쟁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를 보인 데 반해 지식인들은 대체로 항쟁의 과정에서 현실적이고 타협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문학적 묘사는 살아남은 자들의 죄의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저자는 이러한 죄의식이 일종의 집단적 강박으로써 오히려 5·18 항쟁의

의의를 왜소화할 우려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10대 청소년과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김연주와 나영정의 글은 민주주의와 시민권의 의미를 진지하게 성찰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십대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적 체계로서 무엇보다 십대들의 ‘시민권’ 획득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저자들은 의미를 부여한다. 2011년 12월 통과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처음으로 주민발의 형식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성공적 실천사례라는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보수 및 기독교 진영의 공격과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조례가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인권운동과 성소수자운동의 축적된 역사를 바탕으로 기존의 시민권 범주를 확장하는 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라고 저자들은 평가한다. 이종수의 연구는 1991년 지방의회가 설치된 이래 22여 년 동안 지방자치제 시행의 성과와 문제점들을 분석한다. 지방자치제도의 역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구조개편이라는 큰 틀 안에서 방안을 찾아야 하며, 결국 지자체의 예산과 권한 등을 정립하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평은 본 연구소에서 최근 발간한 〈식민지 유산, 국가형성, 한국 민주주의 I, II〉를 검토하고 ‘식민지 근대성’과 ‘탈식민’이라는 목직한 역사적 주제를 되짚는 글이다. 서평자인 김민환은 식민지 근대화론과 수탈론/내재적 발전론 간의 이항대립의 틀에 의해 가려져 왔던 다양한 영역과 쟁점들을 이 책에서 부각시키려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뉴라이트 논자들이 주장하는 식민지 유산의 ‘긍정적 연속설’과는 다른 차원에서 식민지 유산의 하나로 ‘저항적 유산’을 상정하는 연구들, 즉 일제 지배체제를 극복하려는 저항적 주체역량 형성과 민족해방운동을 ‘저항적 근대성’으로 개념화하려는 저자들의 시도를 김민환은 눈여겨 보고 있다. 또한 경제, 정치, 헌법 등의 큰 이야기들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일상적이고 문화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지배와 순응, 저항을 분석하는 새로운 연구들이 탈식민의 시각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러~~

2013년 5월 31일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황정미 씀